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 발의

〈행정안전부 장관〉

의총 열고 당론 채택
“국민 생명·안전에
어떤 타협도 없어”
8일 국회 본회의서
헌정 첫 장관 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 발의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거대 야당이 장관 탄핵을 발의한 만큼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자진 사퇴·파면 촉구, 국회 해임건의 거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사, 종합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 국회의원을 뜻은 충분히 살피고 신중히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향후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걸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은 국회 제일 역할이고 이 문제엔 어떤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 인



여야 3+3 회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과의 3+3 회동을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언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 조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탄핵소추는 해임건의 추진 때에도 고려됐으나, 우선은 단계적 접근하자는 게 당시 중의였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이 장관 지키기’에 치중한 판단 아래 결국 강제적 방법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론 추진 과정에서 굴곡은 있었다. 이 장관 탄핵소추 문제는 지난 2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됐었는데, 당시엔 결정을 내지 못하고 결론을 유보했었다.

이후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날(5일)까지 의견 개진, 청취 과정을 한 차례 더 밟아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론 채택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성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강행 모습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역풍 우려도 소수 있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3건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첫 탄핵소추 발의는 1985년 유태홍 대법원장에 대해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또 대법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회), 2020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 등이 있었으나 가결 사례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8일째 처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적지 않은 편이다. 제

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야당 단독 강행이 어려운 법제 사법위원회 구성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점을 토대로 행배가 순탄치 못할 수 있다.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법사위가 탄핵소추안 회부 시 조사·보고를 하게 되며, 가결이 되더라도 소추위원으로 삼관 변론에 참여해 이 장관을 신문하게 되는 건 법사위원장인 까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정교한 탄핵소추안 작성, 탄핵심판 시 유족 측 의견 개진 등을 통한 보완 여지가 있다.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가결 시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가 있다. 기존 가결 사례 중에서도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뉴스1

“지난해 도청 조직 내 갑질 발생 한명은 ‘강등’·한명은 ‘영전’”

김성수 도의원, 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질타
갑질사건 산하기관 가해자 강등·분청 가해자 영전
피해자 신고 유무 떠나 갑질근절 차원 조사 철저히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도청 조직에서 발생한 여러건의 갑질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성 인사에 가까운 해의 파견이 되었는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처리결과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반면, 분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동료를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의 파견을 보냈는데, 이는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거 아니냐는 청내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돼,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점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도내 공직사회에 있어 발생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 등과 같이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소수직렬 배려 등 행정직위주 승진 개선을”

박정규 도의원, 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은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를 보면 총 28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으로,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명의 승진자도 없는 등 행정직과 타 직렬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많이 어긋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렬별 승진 소요인수에 있어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며, 각

종 사업부서에 근무하며 대규모 국제사업 공모, 재해재난 시 비상근무 투입을 비롯해 늘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을 안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입사년도 3~4년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 뒤처짐으로써 업무의 의욕을 상실하는 직원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은 또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아직까지 우월의식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렬별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소수직렬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함께 복수직렬 자리의 승진 같은 경우 반드시 소수직렬을 염두에 두고 인사에 반영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4·5 전주를 재선거

“NH농협은행 전주 이전 시급… 유치 총력”

임정엽 예비후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지정 모멘텀”



임정엽 전주시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전주에 자산운용이 특화된 제3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도 전북의 특성에 맞춰 NH농협은행의 전주 이전이 시급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6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 여신 규모가 280조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전북으로 NH농협은행의 이전은 명실상부한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NH농협은행은 전국에 1,000여 개에 달하는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 금고의 50%를 점유하는 등 압도적 1위의 금융기관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점포 수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117곳에 달하고, KB국민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점포수가 602곳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농협은행은 오히려 9개의 영업점이 늘어났다는 성장세를 높게 평가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국민연금공단,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J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9개 기관이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지역균형발전과 농도 배려차원에서 NH농협은행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은 마땅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이전 작업과 함께 필요시 입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NH농협은행은 100%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농업 중심도시인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민족은행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 농민과 공유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지정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모멘텀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특별취재반

김전희 주가조작·천공 국정개입 의혹 ‘과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6일 김전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진위 파악을 촉구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과상공세를 벌였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주가 조작은 10년이 지나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한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한 것”이라며 “그러면 그 때 고소를 안 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2010년 6월 16일 김전희씨의 통화 기록, 이 게 재판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저와 이모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이것 증거가 안 되냐”라고 물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 공세 이어져

정청래·고민정·박성준 등 한동훈과 설전
송갑석, 천공 의혹에 “역술인 국정개입 사건”

한 장관은 “그것이 주가 조작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맞받아쳤고, 정 최고위원은 다른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단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주가 매도됐다. 이런 주가 조작 증거가 안 되냐”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라며 “그것까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시기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라는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7월에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이 있었나, 없었나”

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 전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한 장관의 사적인 관계를 두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은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섣부른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며 “사적인 관계로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관계인가”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넣어준 것”이라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재차 “검사나 수사 경찰에 물어봤다. 섣부른 부인과 수배가 카톡을 했는데 이런 어떤 관계로 보나 아주 밀착 관계라든가, 특수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걸 경찰한테

까지 물어봤다”라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3월 천공이라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 이전 TF 소속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 여당 의원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본부 서울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와 관련된 견해를 물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실이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회대의 역술인 국정 개입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전북시민단체 “업추비 부적정 사용 박성태 직위해제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감사에 적발된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의 직위해제와 엄정 징계를 요구했다.

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정운천 의원에 사과요구도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박 정책협력관은 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집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만원 가운데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을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물 지급관리대상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신분상 훈계 조치를 했다.

연대는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일러야 한다”면서 “전북

도는 박 정책협력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광영 전북도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합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으로부터 박 정책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한달 미만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뉴스1